

한국경제 파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라!”

한국경제가 파탄 직전의 위기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얼마전까지도 「아시아의 4마리용 중 하나」 또는 「떠오르는 아시아의 태양」으로 불리우던 한국경제가 IMF를 비롯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500억달러 이상을 차입하지 않고서는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니, 한국국민들은 지금까지 요지경 속을 헤매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럼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원인은 무엇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경제 파탄」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반문하는 국민들이 있겠지만,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병의 뿌리를 진단하고 근원을 색출해 치료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에서 경제파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거슬러 올라가 96년12월 김영삼 정부와 신한국당(한나라당)은 한국경제의 흐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간파, 가장 손쉬운 방법을 채택한답시고 야당의 반대속에서 노동관계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바 있다. 그 직후 민주노총을 위시한 노동자들은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법률 개정을 간과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총파업을 단행했고, 김영삼 정부는 97년들어 노동자들의 압력에 굴복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무효화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경제위기를 부른 근본원인이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즉, YS와 행정관료와 재벌의 합작품이 빚은 한국 최대의 난센스가 연출됐고, 노동자들도 한국경제 파탄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방안을 찾기보다는 미국 및 유럽언론이 지적한대로 「폭동」에 버금가는 파업으로 대처함으로써 한국경제를 파멸로 이끄는 데 일조했다.

다시말해 재벌들은 경제위기의 근본원인을 찾아 스스로 개선하기 보다는 경제위기의 근본이 고임금에만 있는 양 호도하면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고, YS를 비롯 행정부는 국민 다수의 동의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으로 밀어부치는 과거 부도덕한 정권의 선례를 답습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하는 우를 범했으며, 노동자들도 현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근로조건 악화가 재벌 및 정부의 책임인 양 호도함으로써 경제악화의 일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상황을 악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경제 파탄의 가장 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한마디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으나 무소불위의 소유욕으로 가득차있는 재벌들, 「경제」에 대한 철학이 빈곤한 상태에서 「개제」를 외쳐대는 YS와 행정부 고위관료들, 무리한 요구와 안일한 자세 및 태만으로 상황을 어렵게 만든 노동자(국민) 3자가 다같이 책임져야 한다는 데 이의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죽하면, 재벌그룹의 경영자들까지도, 기아사태를 앞당기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이끈 삼성그룹, 무소불위의 재벌그룹 오너 및 경영자들, 현실을 모른채 무책임한 정책과 실정 그리고 기아사태를 신속히 수습하지 못한 YS를 비롯한 전 부총리 강경식 및 고위 정치관료들, 부실의 책임을 회피한 채 오너인 양-사실 오너라도 경영을 악화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자리지키기에 연연한 김선홍 회장을 비롯한 기아그룹 관계자들을, 세종로 네거리에서 처형해야 마땅하다는 「강경론」이 설득력을 얻었을까!

기아사태를 필두로 IMF의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서는 생존할 수 없는 한국경제의 현실앞에서 수십 조원의 국가 부를 탕진한 국적들을 공개처형해야 한다는 것은 지당하고도 또 지당한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 누가 반대할 것인가!

특히, 한국재벌들은 한국경제를 오늘과 같이 파탄으로 이끈 절대적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몫을 담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비과학적인 경영방식이 그렇고, 무절제한 소유욕이 그러하며, 한계를 모르는 사업확장욕이 그러하다.

더군다나 국가와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만 잘 살면 된다는 「일류의식」은 오늘날 한국경제를 이 지경으로 이끈 근원으로 척결의 대상임을 뚜렷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들어 경쟁력을 쪼먹는 4대 요인이라고 손꼽는 것을 들어보면 한국재벌들의 자가당착을 근방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재벌들이 주장하는 4대 경쟁력 저해요인은 바로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이기 때문이다.

고임금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가? 80년대말 또는 90년대초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은 독점과 수출호황을 바탕으로 너무나 쉽게 임금올리기 경쟁에 여념이 없었고, 그 결과 고학력과 고임금의 복합으로 임금지급액이 천정부지로 올라 경쟁력을 쪼먹는 직접적인 동기가 되었다. 고임금과 고학력이 절대 필요한 요인이라면 모르겠으나, 전혀 필요없는 부분까지도 고학력으로 채우면서 중소기업들의 필요인력을 사장시키는 그리고 임금상승을 부채질하는 비효율과 불공정의 시범을 저질렀으니 그들 스스로가 고임금이 문제라고 외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 무엇인겠는가.

고금리, 고지가, 고물류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재벌들은 고임금과 함께 이들 3대요소도 국가 또는 정부의 책임인 양 떠들어대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가 그들 스스로의 책임인 것이다. 무절제한 투자와 문어발식 사업 확장욕 그리고 무자비한 차입경영은 고금리의 직접적 원인인 것이다.

또 한국재벌들의 부동산 소유욕과 땅투기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는 사회악의 근본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무자비한 땅투기는 우선적으로 그들의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경영을 커버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그들의 목을 조르는 근원이 되고 있음은 기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최근 전경련을 비롯한 재벌들이 금융실명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고금리와 고지가의 원인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고물류비 또한 같은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고물류비의 원인이 무엇인가? 현재 한국경제가 고물류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교통체증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 교통체증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한국재벌들이 환호했던 전두환·노태우 반란군정권이 들어서면서 교통사고의 처벌을 대폭 경감해주면서 땅투기를 선도해 서민들의 저축의욕을 송두리채 빼앗아감으로써 쓰고 보자는 과소비욕을 부채질한 것이 직접적인 동인이며, 고임금을 부추겨 너도나도 자가용을 소유하게 만든 것이 두 번째이다.

한마디로 한국재벌들은 스스로가 경쟁력을 쪼먹는 경영을 일상적으로 시행해오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은 전혀 제기하지 않고, 정부와 노동자(국민)들만을 경쟁력 저하의 주범으로 몰아부치고 있는 것이다. 한국재벌들의 무책임한 경영자세, 그리고 무능과 무소불위의 소유욕을 단적으로 증명해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YS정부와 노동자(국민)들의 잘못이 미미하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YS정부는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나머지 「경제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오늘의 사태를 불러오고 심화시킨 책임을 면하기 어려움은 물론 추후에도 「4마리용 중 하나」를 「세계의 거지」로 전락시킨 원죄를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근로자 또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이다. 주제를 모르고 과소비와 사치와 무능과 무소신과 일탈적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국가경제를 망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차후에도 현재와 같은 낭비와 무책임이 계속된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선진국들의 지원이 시행된다해도 한국경제가 다시 일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아니 타의에 의한 해고와 감봉의 아픔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현재의 생활태도와 업무자세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근로자를 탓하느냐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침 저녁을 불문하고, 그리고 공휴일이나 평일을 불문하고 일상화되어 있는 교통체증, 그리고 흥청거리는 술집과 음식점 등은 한국국민들의 과소비 및 낭비풍조, 그리고 허세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사실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한국국민들과 한국재벌들과 한국관료 및 한국정치인들은 누구를 탓하기에 앞서 모두가 반성하는 자세로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점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렇지않을 경우 IMF를 비롯한 미국·일본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제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는 불행을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 더 이상의 자만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페인을 너무 빨리 터트려버린 한국』 『1만달러 소득에 2만~3만달러 소비를 일삼는 한국국민』
『괌과 사이판과 동남아로 신혼여행을 가지 않으면 바보취급받는 한국의 젊은이들』
한마디로, 무능과 무책임과 무절제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현상인 것이다. 다시한번 『Don't Cry for Me Argentina!』를 외쳐보고 싶다.

『한국국민은 과연 무능하고 무절제하며 무책임한 종족인지 다시한번 되돌아 보아야 하는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7/12/1>